

민주 ‘8·2 전당대회’ 앞두고 갈라지는 호남 정치권

광주·전남 국회의원 지지 후보 박찬대 12·정청래 4·중립 2명
의원 표심 다르고 당원 표심 달라 ... ‘호남 대전’ 결과 오리무중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뽑는 8·2 전당대회가 과열되면서 호남 정치권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수의 권리당원이 포진된 ‘호남 표심’을 후보들이 집중 공략하면서 진영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으며, 전당대회 이후 광주·전남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 정치권이 정청래·박찬대 후보 지지 대열에 합류하면서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상당할 전망이다. 지역 정치인과 일반 당원이 각각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지역위원회 내 분열’도 심각해지고 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대표 경쟁이 가열되면서 호남지역 경쟁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지지 진영간 세력 대결도 뜨겁다.

현재, 당 대표 경선 관련해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8명 중 12명은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4명은 정청래 후보의 당선을 돕고 있다. 또 2명의 국회의원은 표면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의원의 지역 조직은 박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해당 의원들의 지역 조직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총동원됐다.

무엇보다도 광주·전남 다수 광역·기초의원들도 당 대표 선거에 동원돼 개인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거나 이들의 지역 내 활동을 돕고 있다. 직접적인 정치 행위에 어려움이 있는 광주·전남 단체장 조직의 상당수도 박 후보 진영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현재 당 대표 후보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경선을 치르고 있어 표면적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격전지인 호남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경쟁이 뜨겁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도 호남과 수도권이 동시에 투표를 하면서 호남 여론이 수도권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면

서 수도권 투표도 이끌 것으로 보이면서 호남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또 현역 정치인과 당원의 지지 후보가 다르고, 한 지역위원회 내에서도 당 대표 지지를 두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번 호남 전당대회의 큰 특징으로 손꼽을 수 있다.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등의 ‘오더’에 따라 광역·기초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당원 투표를 이끌었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이런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현역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의 표심과 일반 당원의 표심 차이가 분명해 ‘호남 대전’ 결과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전망이다.

조직 내에서 지지 후보가 일치하지 않는 기현상도 속출하고 있다. 지역위원회 내에서도 각기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 경쟁자간 ‘전당대회 대리전’ 양상도 보이고 있다. 당 대표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방선거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지지 후보 구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이후 “호남 정치 지형 재편이 불가피 하고,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 대표는 권리당원 55%, 대의원 투표 15%, 일반 국민 30%를 반영해 선출하며 호남 권리당원은 전체의 33%, 수도권은 42%에 달하기 때문에 호남과 수도권에서 사실상 당 대표가 결정된다.

이날 현재 영남권과 충청권 경선이 마무리된 결과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따돌리며 누적 1위를 이어갔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 후보의 이들 지역 누계 득표율은 62.65%로, 박 후보(37.35%)를 25.3%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당권 레이스 초반 선두를 달리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 강선우 임명 수순...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번 주 내 임명 의지 표명
“인사 시스템에 문제 없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초반 인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진숙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불거져 대통령실은 잔뜩 긴장한 채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주 내에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외에 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로 요청

했다”며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국방부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26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강선우 비서관 사퇴로 인사 논란을 일단락 지으려는 모양새이지만, 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대통령실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언론이나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이 인사 검증에서 허용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갈 때 사의 표명으로 답

을 드린 것이며,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예상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을 거쳤지만,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지는 태도에 주목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약조간’이었다는 점을 환기하는 동시에 돌출 변수에 대해서 신속하게 책임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면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입장에서선 인사 검증 부실 책임론이 계속 이어질 경우 각종 개혁 과제가 산적한 새 정부의 임기 초반 국정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에도 여론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내란 옹호’ ‘5·18 폄하’ 강준욱 비서관 사퇴

내란을 옹호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라 표현해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강 비서관은 이날 오전 자진해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통합비서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강 비서관은 자진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이던 올해 3월 펴낸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론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한 예상외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면 된다”며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 주목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